

---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경제부·사회부  
발 신 경제민주주의21  
일 시 2020. 6. 9. (총 3 쪽)  
문 의 전화 | 010-3060-1917 이메일 | econdemos21@protonmail.com  
제 목 [논평 11호]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지원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

---

##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지원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

- 국민 세금 투입된 사업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임의로 거부
- 지원 결정 과정과 사후 보고서의 공개는 투명 행정으로 가는 지름길
-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약속과도 배치돼
-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정의연 국고보조금 관련 자료 국회에 제출해야

1. 어제(6/8) 조선일보(<https://bit.ly/3cLnZfM>)의 보도에 따르면, 여성가족부는 ▲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”)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▲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광상도 의원(미래통합당, 대구 중구남구)의 요구를 거부했다. 여성가족부는 “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”는 점을 거부의 사유로 제시했으나, 그 뒤 이를 감안한 광 의원의 수정 요구에 대해 ‘정의연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’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20.6.8.자 보도설명자료(<https://bit.ly/3h7G770>)를 통해 실제 정의연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사업을 결정한 기구는 심의위가 아니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”)에서 결정하였으며,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“일본군 ‘위안부’ 등록 또는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제출하지 못하였”다고 밝혔다.

2. 경제민주주의21(대표: 김경울 회계사)은 여성가족부의 해명이 자료제출 거부의 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설사 조선일보의 보도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해도,

여성가족부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여가부가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**‘심의위’가 아니라 ‘선정위’가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선정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‘선정위’의 명단을 제공하면 그 뿐이다.** 또한 국회의 그 자료만으로는 보조금 사업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**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심의하는 ‘심의위’의 활동을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그 뿐이다.** 전·현직 심의위원중에 정의연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이고, 그 외 심의위와 선정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여가부는 두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.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사후 보고서 미제출의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시했지만 이 점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**정보를 익명처리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.** 여성가족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.

3.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투입된 **국고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내역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알 권리가 있고, 정부는 이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.**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온 같은 날,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(<https://bit.ly/2Up3IGx>)하면서 **“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”**하겠다고 약속했다.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. 이번 정의연 사건의 경우 **정의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가**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, 위안부 피해자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. 경제민주주의21은 **▲여성가족부는 이제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**하고 **▲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위안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듬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대의의 관점에서 이들 사업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** **감사**하고 **▲정부는 조속히 기부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**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. 끝.